

# 經濟改革의 體制的 性格

金 秀 行

## 〈목 차〉

- I. 머 리 말
- II. 부정·부패의 척결
- III. 작은 정부와 경쟁 원리
- IV. 재벌의 지배 강화
- V. 노동자·농민등 직접적 생산자의 희생
- VI. 경제정의의 상실
- VII. 결 론

## I. 머 리 말

김영삼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개혁'정책을 실시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개혁정책들이 과연 우리 사회를 어떤 형태의 사회로 만들 것인가를 추측해 보고자 한다. 물론 집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 중인 정책들의 효과가 아직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이 '인기 관리에 예민하기' 때문에, 정부가 앞으로 어떤 개혁정책을 들고 나올지 알 수 없거니와, 지금 실시 중인 정책들이 변경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지난 1년간의 정책 기초와 '신경제 5개년계획(1993-98)'의 철학이 지닌 논리적 귀결을 문제 삼을 수 밖에 없다.

## II. 부정·부패의 척결

정부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공직자의 재산 공개를 통해 그리고 추문폭로적 전술을 사용해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을 사퇴시켰다. 군사정권아래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장군들을 퇴역시키고 군대 안의 사조직을 해체시켰고 군수관련 비리를 파헤쳤다. 세무행정·대학 입시·뇌물수수등을 둘러싼 부정·부패도 폭로되었다. 그리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해 음성적인 익명의 자금거래를 봉쇄하려고 했다.

이러한 사정활동은 김영삼 정부가 자기의 권력기반 또는 권력자원(power resources)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전의 정부는 썩었지만 지금의 정부는 깨끗하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었다. 사정은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고, 공직사회 그리고 나아가 사회 발전에 참신한 충격을 주었다.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몇 가지 정책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는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해 공직자의 재산을 일반에게 공개했다. 이처럼 공직자 재산공개가 법제화된 것은, 정부 출범 초기의 재산공개 파동에서 드러난 권력집단의 부정축재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배경으로 한다. 이 조치가 정착될 경우 공직자의 재산변동이 공개되기 때문에 공직을 이용한 부정축재는 상당히 억제될 것이다.

그러나 공직자의 재산 축적과정이 제대로 추적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오히려 부정축재자 중 일부를 사퇴시키고 나머지에겐 면죄부를 발급하는 정도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결 방식은 김영삼 정부로서는 피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김영삼씨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사람들이 바로 이전의 집권당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전의 정권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부정·부패·무능의 공직자를 추방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이번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졌을 것이다. 이번의 재산 공개 과정에서도 집권 세력 내부에 심한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은, 김영삼 정부의 권력기반이 이전의 기득권층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둘째는 금융실명제를 1993년 8월 12일 전격적으로 실시했다. 정부의 특

혜를 얻기 위해 기업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치인과 관료에게 정치자금과 뇌물을 주는 것, 세금을 내지 않고 지하경제에서 부를 축적하는 것, 차명·가명계좌를 통해 부를 은폐하는 것 등의 부조리를 제거하고, 개인의 종합 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거대 재산가가 성실하게 세금을 내면서, 축재했는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금융실명제의 실시 과정에서 기득권층이 가장 크게 반발한 것은 기존 재산에 대한 세무 사찰이었다. 정부는 기득권층의 정치적·경제적 ‘총파업’ 위협에 지고 말았다. 몇 차례의 이른바 ‘보완조치’를 통해 ‘이미 축적된 부’에 대한 사찰을 중단하고, 차명을 실명으로 인정하고 말았으며, 종합과세를 1996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후퇴는 김영삼 정부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권력기반이 기득권층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어쨌든 지난 한 해는 부정과 부패를 제거하기 위해 정부는 외견상 큰 노력을 기울였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김영삼 정부가 우리 사회를 한 걸음 진보시킨 것은 사실이다. 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는 부정·부패의 척결은, 기업가에게는 경제원칙에 따라 사업할 것을 가르쳤고, 일반시민에게는 고발정신과 언론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을 일깨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부정·부패의 척결과정은 김영삼 정부가 자기의 권력기반을 어디에 두려고 하는가를 분명히 폭로했다. 이 점에서는 이전의 정권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새 정부가 자기의 권력자원을 확대하기로 작정했다면, 출범 초기의 국민적 지지를 토대로 정책을 제대로 추진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득권층의 반발에 대해서는 ‘양심’이라는 단어 하나로 대항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새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범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을 것이며, 기득권층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권력기반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새 정부는 이전의 정권보다는 중산층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중산층은 말 그대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층 상승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작은 재산에 어떤 피해가 오지 않을까 전정궁궁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산층은 위의 정책들이 ‘제대로’ 실시되는 것을 두려워 한다. 새 정부

는 분명히 이러한 증산충을 포섭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거대한 재산소유자와 증산충을 자기의 권력기반으로 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증산충은 거대한 재산소유자에 항상 종속되어 있으면서 계층 상승을 도모하기 때문에, 결국 새 정부의 권력기반은 거대한 재산소유자라는 결론이 나온다.

### Ⅲ. 작은 정부와 경쟁 원리

새 정부는 정부 개입을 축소하고 경제에 경쟁 원리를 강화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로 모든 부문의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정책들을 하나씩 살펴 보자.

첫째로 정부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고 있다. 환경·위생·안전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자유화·외환관리의 철폐 등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인가·허가·등록을 둘러싼 부정·부패를 제거한다는 측면, 불필요한 개입의 제거로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측면,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규제 완화에는 여러 가지의 위험도 뒤따른다. 환경·위생·안전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환경 오염이나 산업 재해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시 말해 규제 완화가 개별 기업에게 주는 이익보다 사회적 손실이 더욱 클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말해, 경쟁이 정부 개입보다 항상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과잉투자·과당경쟁은 자원의 엄청난 낭비를 야기할 수도 있다. 물론 경쟁에서 승리하는 대기업은 독점력을 얻어 국민에 대한 과세를 통해 초과이윤을 획득할 것이다.

둘째로 정부는 금융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나의 예로 정부는 지난 해 11월 1일부터 정책금융을 제외한 모든 대출금리를 자유화했다. 정부는 이 조치가 당국의 지시와 통제에 묶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높여 경기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금융산업도 자생력을 키워야 하며, 스스로 신상품을 개발하고 자금의 조달과 배분을 수익성에 의거해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은행에게 정책금융을 강요한다면, 금융계의 고질적 병폐인 ‘꺾기’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신용도를 기준으로 차별금리를 적용하면,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훨씬 큰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은행의 주식 소유 한도를 해제하면, 은행은 재벌의 금고 역할만을 하게 될 것이고, 재벌의 경제력은 점점 더 증대할 것이다. 만약 금융기관의 업무 분할을 폐지한다면, 금융기관들이 수익성 있는 특수 업무에만 집중함으로써 경쟁이 격화하고, 일부 금융기관의 도산과 그것에 따른 경제적 혼란이 뒤따를 수 있다.

셋째로 정부는 외환관리를 철폐하려고 한다. 물론 자본의 국제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으므로, 외환관리가 제대로 집행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외환관리가 철폐되면, 자본의 해외 수출이나 도피를 막을 수 없고, 자본의 유출입과 환율이 격변할 수 있으며, 따라서 경제는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넷째로 정부는 공기업을 민영화하려고 한다. 공기업은 국가주도적 자본축적의 산물로서, 해당 부처의 돈줄 구실을 하고 퇴역장성 및 여당인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오면서 방만하게 운영되었기 때문에, 민영화를 통해 경쟁을 도입하고 경영을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기업은 사실상 해당 부문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대로 민영화한다면 또다른 독점기업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약간의 공기업은 손실을 보면서도 국민에 대한 서비스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공기업을 민영화해 수익성 원리에 따라 운영한다면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삭감될 것이 분명하다. 공기업은 국가가 세금이나 차관으로 건설한 기간산업인데, 이것을 민간에게 매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재벌에게 수익성 있는 투자영역을 제공하면서 그들의 지배영역을 확대시켜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규제의 완화와 공기업의 민영화는 궁극적으로는 대자본의 이윤과 축적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활은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 IV. 재벌의 지배 강화

정부는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간에

조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 말하고 있지만, 경제정책의 목표가 개방화·국제화라는 새로운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벌 위주의 정책은 불가피하다.

사실상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가장 고심한 부분은 재벌에 대한 정책이었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온갖 특혜와 비리를 안고 문어발식 경영과 투기로 치부해 온 독점재벌은, 김영삼 정부에게는 다루기 곤란한 상대였다. 왜냐하면 성장 중심의 정책기조를 채택한 정부로서는 재벌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해야만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재벌의 폐해에 대한 지적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재벌해체론이 대두되어 왔으므로 재벌을 규제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침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을 계기로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강조하면서 재벌에 대한 규제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행된 주력업종제도는 재벌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의 억제보다는 재벌의 대표적 기업을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키워보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즉 30대 그룹에게 주력업종을 선택하게 하고, 그 주력기업에 대해서는 여신관리·기술개발자금·공업입지에 관한 각종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인다는 시책이다. 그러나 이 시책에는 재벌그룹의 계열사들이 독립적인 경영체제를 확보해야 한다는 전제가 누락되고, 비주력업체의 정리를 강제하는 조치가 미비되어 있다. 더욱이 3년마다 자의적으로 주력기업을 변경할 수 있게 한 규정을 재벌이 악용할 경우, 업종전문화를 통해 오히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강화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 또 최근 재벌이 취한 계열사 통폐합 조치도 업종전문화와 소유분산을 명분으로 하고는 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이미 정리하고 싶었던 사양업종들을 매각하거나 가족 내에서 그룹을 분점하는 형식을 취해, 계열사의 숫자만을 줄이는 데 불과하다. 이러한 재벌들의 눈가림식 조치는 정부의 업종전문화 정책에 기민하게 대응해 문어발 정리의 생색을 내면서 정부의 더 큰 지원을 얻어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기업을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육성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소유를 집중시켜 일부의 개인들이 대기업을 지배하도록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방법도 있고, 경영의 민주화를 실현하게 함으로써 대기업을 통제하게 할 수도 있다. 문제는 국가경쟁력을 무엇 때문에 향상시키려고 하는가

에 있다. 만약 모든 국민의 고용·복지·생활을 향상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재벌의 경제력을 증진시키지 않고도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을 쏟지 않고 있다.

## V. 노동자·농민 등 직접적 생산자의 희생

김영삼 정부의 노동정책은 정권 출범과 함께 개혁적 성향의 노동부장관이 들어서면서 귀추가 주목됐다. 노동계에서는 과거의 권위주의적이고 사용자의 입장에 편중되어 있던 노동행정이 민주적으로 쇄신되기를 기대하면서도, 신경제계획이라는 성장 중심의 전체적 정책기조에 어떻게 장관의 개혁노력이 견뎌나갈 수 있을까 우려했는데, 결국 노동행정의 개혁은 없었다.

국가경쟁력의 강화라는 지상명제하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자에게 생존권 요구를 자제하도록 강요하고, 노동운동에 대해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명하게 나아가고 있다. 이른바 ‘신노동정책’의 한계와 실상을 명확하게 보여 준 예가 울산 현충련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정부의 강경진압이었다. 노동부는 현충련의 파업에 대해 불법·파업·제3자개입 등의 구실로 강경한 대응을 펴다가, 급기야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사태를 급속히 마무리지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쟁의조정법 40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나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치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했을 때”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긴급조정권이 파업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지난 5·6공 시절에도 한번도 사용되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현정권이 노동운동에 대해 유례없이 강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노동운동을 국가간 생존경쟁시대의 ‘내부반란’으로 규정해 지나치게 강경하게 대응하는 정책은, 김영삼 정권이 들어설 때부터 ‘고통분담’, ‘집단이기주의 엄단’ 등의 표현에서 이미 예고되었던 일이다. 그리고 현충련 사태 이후 정부는 자동차 5사와 현대중공업 등 조선 3사, 총 8개 사업체를 노사분규 특별관리업체로 지정해, 사후진압이 아닌 사전적 감사감독을 통해 노사분규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 ‘신경제 5개년 노사관계 실천방안’에서는 정부출연기관 및 투자기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함

으로써 공공부문의 노동운동에 대한 제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물리적·제도적 노동통제와 함께 정부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한 ‘노사협조주의’의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예컨대 과거의 비생산적인 투쟁을 지양하고 “노조는 생산성과 품질향상에 힘써야” 하며, “시민운동·소비자운동을 통해 노동운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압력을 가하고 감시·감독하는 방법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난 해 12월 8일 노동교육원 주최 세미나에서 제기된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른바 노·사·정의 ‘신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의도하는 바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활성화되었던 민주노조운동을 체제내화하고, 6월항쟁의 ‘동지’였다가 지금은 노동운동에 대해 등을 돌린 소부르주아 계층의 시민운동까지 총동원해 일본식 노사협조주의를 정착시키려는 것이다.

그리고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노동력 이용의 유연성(flexibility)을 강화해, 노동비용을 절감하고 노동통제를 높이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노동부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중간착취를 강화하는 근로자 파견법의 제정을 노동층의 적극반대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임시총회에서 추진할 것을 공식 표명했다. 또한 전경련은 시간외노동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지난 1987년 노동자대투쟁에 의해 폐지되었던 변형근로시간제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의 유연화 전략은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불붙고 있는 경영혁신운동에서도 조직 개편, 감량, 능력주의, 성과급 강화를 통해 노동자간 경쟁을 조장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농산물 수입개방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영삼 정부의 농업정책은 개방화에 대해 “농업구조개선의 조기실현과 농어촌 정주환경의 획기적 개선”이라는 전과 별다른없는 목표만을 세워 놓았을 뿐, 존폐위기에 놓인 농업과 농민의 생계 문제에 관해서는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지난 해 7월 2일 청와대에 확정보고된 신농정안의 주요 사항은 농지 축소, 수입개방 허용, 농산물가격 지지정책 포기, 전업농육성 등이 기본 골자로 되어 있다. 이처럼 정부의 농업정책은 수입개방을 기정사실화하고 비현실적인 전업농육성의 논리로 일관함으로써 대다수 농민의 탈농과 농업의 해체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냉해피해, 추곡수매, 쌀시장개방 문제 등을 보더라도 현정부의 농정이 농업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갖추지 못하고, 과거처럼 여전히 책임 회피와 사실 은폐, 농민 기만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 준다.

냉해피해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피해액만 해도 5,500억원에 이르렀으나, 냉해피해농가 지원금은 고작 1,796억원을 피해농가의 66%인 2천가구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쳤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16일 정부와 민자당은 추곡수매가 인상률을 1984년 이후 최저치인 3%로 동결하고 수매량도 9백만섬에 묶어둘 것을 확정했다. 전농과 민주당의 추곡수매안인 16%선의 인상, 1천2백만섬 이상의 수매와 비교하면 크게 미달하는 숫자다. 그런데 정부는 양곡관리기금의 적자누중에 따른 정부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의 하부구조는 정부가 정비하되, 생산·유통 활동등은 생산자가 주도토록” 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그동안 거둬들인 농정 실패의 희생물이 되어 온 영세농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한편 무엇보다도 지난해 12월 15일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은 큰 위기에 몰리게 됐다. 미국 등 선진 농산물수출국의 요구가 거의 관철된 협상결과에 의해 우리나라는 주곡인 쌀은 물론 쇠고기 등 주요 농가소득원을 포함한 모든 농수산물에 대해 수입개방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런데 제네바 최종협상 직전까지 정부가 보여 준 국민기만적인 태도는, 신농정의 허상과 “확고한 정책집행으로 농어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선언한 정부의 무책임성을 드러낸 것이었다.

## Ⅶ. 경제정의의 상실

김영삼 정권이 출범한 시기는 세계사적으로 볼 때도 1980년대 이래의 신보수주의 조류를 대체할 어떤 현실적인 진보노선이 등장하지 못한 채, 자본의 세계적 경쟁의 격화 속에서 사회 내부적으로는 경쟁원리와 능력주의가 팽배하고 사회보장이나 기업활동의 규제는 철폐되어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층에 대한 보호막이 없어지고 가진 자가 더욱 힘을 발휘하게 되어 사회가 양극화될 가능성이 많다.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도 이러한 면들을 엿볼 수 있다.

신경제계획에서는 ‘경제정의’는 “경제발전을 위한 모든 국민 각자의 기여

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실업자·빈민·노약자·불구자·학생·아동들에 대한 급부를 경제정의의 개념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하에서 재정에서도 수익자 부담을 강조하고 있으며, 공공요금 을 인상했다.

“지금까지 철도·전력·우편요금 등 공공요금과, 고속도로통행료·운송료·공항·항만사용료 등 서비스 요금의 인상을 억제해 옴에 따라 재정의 부담이 늘어났고 공공서비스 공급능력도 감소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물가에 큰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공요금을 현실화하여 가격구조를 정상화하고… 아울러 교육 및 복지지출분양에 대해서도 수익자부담을 강화하여 재정부담의 증가 요인을 완화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요금과 교육비의 인상은 기타 소비재가격의 연쇄적인 상승을 유발함으로써,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결국 김영삼 정부의 경제정의는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막마저 걷어내고, 이들을 시장기구의 야만적인 경쟁원리 속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 VII. 결 론

『신경제 5개년계획(1993-97)』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과거 개발년대에 우리 경제의 발전원동력이 되었던 정부의 지시와 통제에 의한 경제운용은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다양해짐에 따라 점차 그 한계를 보이게 되었으며… 이제 사회가 민주화되고 성숙됨에 따라 모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창의력의 발휘만이 가장 효율적인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게 되었다. … ‘신경제’란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경제를 일컬으며, 이때의 모든 국민이란 정부와 민간이 함께 포함되는 개념이다.”

여기서 모든 국민을 — 좀 더 자세히 구분한 것에 의하면 — “경제행정을 담당하는 공직자,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원(즉 기업주와 근로자)·농어민·자

영업자, 소비생활의 주체인 가게의 일원으로서의 개인”을 가리킨다.

모든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능동적 창의를 진정으로 요구한다면, 그들을 우선 민주적으로 조직하는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고, 둘째로 이러한 이익단체가 개혁 정책의 입안·집행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 민주적으로 산별노조, 나아가 전국차원의 단일노조를 결성하는 것을 허용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만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고, 전국차원의 단일노조가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권위를 가져 ‘노동자들 사이의 고통분담’ 등 노동자계급의 연대성과 평등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모든 국민이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힘이 많이 들 것이다. 그러나 결코 불가능한 것도 아니며 ‘문민정부’는 당연히 그러한 노력을 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기업주의 이익과 노동자의 이익은 다르지만, 정부·기업주단체·단일노조가 모여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논의하면서 물가·임금·배당·노동시간·고용 등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사실상 이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정책은 모든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 채 점점 재벌 위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신경경제계획은 ‘고통분담’을 호소하면서, 노동자에게는 “그동안 지속되어온 생산성을 넘는 높은 임금상승으로 인하여 ‘고임금—고물가’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왔던 점을 감안하여 금년에는 산업평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해 줄 것”과 품질 향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당부하고, 농민들에게는 “추곡수매가 인상 요구를 자제할 것”과 “정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영농개혁에 노력하여 농촌에서도 변화의 새물결이 일어나도록 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며, 노동자와 농민의 자발적 참여와 능동적 창의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다.

개혁정책의 실효성은 개혁을 주도하는 세력이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참신한 세력이어야 보장되고, 개혁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은 개혁세력의 지지기반이 광범하고 확고해야 유지될 수 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는 정권의 모태 자체에 개혁의 대상이 될 ‘수구세력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으며, 처음부터 노동자와 농민 등 광범한 민중계층의 참여를 배제시킨 채 대통령의 독단에 의한 ‘깜짝 쇼’ 위주의 개혁조치를 펼쳐 왔다. 이처럼 정권의 권력자

원이 취약한 결과 일부 기득권층의 반발에 대해서는 물러서기 일쑤였고, 개혁의 실질적 내용이 되어야 할 노동자와 농민의 요구에 대해서는 억압으로 일관함으로써 이들을 지지기반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개혁정책의 기본 철학은 개혁성향보다 오히려 보수성향이 짙은 자유주의, 다시 말해 1980년대 구미식의 신보수주의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제개혁만 보더라도 재벌위주의 경제구조를 시정하고 복지증대를 통해 계층간 불균형을 완화하며 투기적 축적구조를 척결하는 것 등의 당면과제가 분명히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정부로 시장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논리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기조가 재벌의 지배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를 양극화시키게 될 것은 자명하다.

결국 김영삼 정부의 정책은 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해 진정한 의미의 대외경쟁력을 증대시키지도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더욱 큰 억압과 곤궁을 겪게 될 노동자·농민 등 직접적 생산자들과, 실업자·불구자·노약자·학생·아동 등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국정의 운영에 참여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혁신정당을 만들게 될 것이다.

우리의 역사에서 김영삼 정부는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인가? 첫째는 지난 30년간의 군사독재를 종결짓고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이러한 정치적 민주주의하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재벌과 이것에 의거하는 중산층에게 해계모니를 잡게 할 것이다. 셋째로 민중계층은 사회적·경제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경제적·정치적 투쟁을 시도할 것이다.